

평화재단 제55차 전문가포럼

THE PEACE FOUNDATION 55th FORUM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역내국가 간 갈등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가

일시 | 2011. 9. 18 (화) 오후 2:00-5:00

장소 | 평화재단 강당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역내국가 간 갈등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가

- 일시 | 2012년 9월 18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사 회 김재철(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4:00	(5)	개 회
14:05	(10)	여는말 김형기(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5	(20)	발표 1 동아시아 민족주의 심화의 현황과 배경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35	(20)	발표 2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한중일 삼국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김성철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14:55	(20)	토론 1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토론 2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15:15	(15)	휴 식
15:30	(8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6:50	(10)	닫는말
17:00		폐회

차례

여 는 글		4
발 표 1	동아시아 민족주의 심화의 현황과 배경.....	5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한중일 삼국의 협력관계.....	17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여는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동아시아 각 국은 꾸준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로의 세력전이(Power shift)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21세기는 ‘동아시아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제기되어온 회의론도 점차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과의 뒤편에서는 역내 국가 간 정치·군사적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큰 지각판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그 경계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해양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각 국의 민족주의의 발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해와 상생의 동아시아시대를 열어가기에는 아직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또한 동아시아시대의 역내 협력 관계에 있어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불안요소가 사라지고 동아시아시대에 걸맞은 화해와 상생의 구조가 구축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시대의 평화와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분단극복과 동아시아 협력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를 대비해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그 전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연속 2회에 걸쳐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심화와 북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화해와 상생의 동아시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내 갈등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재 북한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들과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동아시아 민족주의 심화의 현황과 배경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II.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이론적 접근

III. 동아시아 민족주의 심화 현황

IV. 민족주의 갈등의 원인들

V. 결론

I. 서론

-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부터 대두된 “중국의 부상” 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중요성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아 한때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모델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였으나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음.
-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로 경제발전이 주춤하는 사이 동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 태평양 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 새로운 발전 엔진으로 주목되어 왔음.
- 비록 일본의 성장이 20년간 정체되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지역의 안보문제가 존재하지만, 중국의 빠른 경제적 성장과 ASEAN plus Three (APT),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등의 동아시아 다자 협의기구의 정착 등은 지역발전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견인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아시아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간의 가치관 충돌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안보와 협력의 틀을 새로이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남중국해 (중국-베트남: Paracel Islands & 중국-필리핀: Spratly Islands), 선유도 (Diaoyudao/Senkaku), 이어도, 독도 분쟁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영토분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1년 러시아와 북한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온 리더십 교체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간의 주권문제와 역사적/문화적 자존심 문제가 결합되어진 복잡한 이슈로서 각 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
- 최근의 이러한 영토분쟁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결합하며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주변국가들 간의 새로운 힘겨루기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의 현황과 배경의 분석은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설명하고,

냉전 이후 민족주의가 동아시아에서 부상한 배경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끼친 영향을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함.

II.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이론적 접근

- 초기 민족주의 연구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왔음. 특히 Carlton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1931),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1944),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1945) 등에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음.
- 1950년대에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들을 세우면서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의 반식민지 민족주의 연구에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역사학 중심의 민족주의 연구는 정치학과 사회학 중심으로 이동하였음.
- 1950년대와 60년대 들어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원생주의 이론(Primordialism)이 발전하였음. 원생주의 이론은 Edward Shils, Pierre Van Den Berghe, Clifford Geertz 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는 친족 문화, 언어, 종교, 인종, 영토라는 요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진 집단 정체성이며, 또 그들 자신들의 국가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사상과 행동이라 주장함.
 - 원생주의 이론의 대표적 예들은 이집트, 이스라엘, 중국, 몽고, 한국 등이 있음.
 - 원생주의 이론과 가까운 이론으로 永恒주의 (Perennialism)가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유사 이전 (immemorial)부터 존재해 왔으며 상황에 따라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를 거듭해 왔다고 주장함. 대표적 학자들로는 Joshua Fishman (1980), Hugh Seton-Watson (1977), Walker Connor (1978 and 1994), Donald Horowitz (1985 and 1991) 등이 있음.
- 1960년대 원생주의 이론에 반대하는 근대주의 이론 (Modernism)이 Tom Nairn (1977), Ernest Gellner (1983),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1983), Benedict Anderson (1983)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들 근대주의 이론가들은 민족 국가와 민족주의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 교육 등을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물이라 주장함.

- 어니스트 겔러는 국가 내의 대중 교육 체계(mass education system)와 유럽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생성하였다고 주장함.
 -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y)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현재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릭 홉스봄은 근대 민족주의는 정치적 이익과 민중의 동원과 집결을 위해 역사, 종교적 예식, 정치적 심볼 등을 조작하거나 변조시켜 발명(invented)된 정치사상으로 보았음.
 -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 이후의 서부 유럽 국가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근대주의 이론의 대표적 예들임.
-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근대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나, 근대주의 이론의 nation-building 모델은 민족주의 이론의 주류 정설로 인정받고 있음.
- 현재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의 특성은 민족주의 이론의 두 기둥인 원생주의와 근대주의가 혼재되어있음.

III. 동아시아 민족주의 심화 현황

-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민족주의 이론가들은 민족주의가 국제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했음.
- Stephen Van Evera는 학자들이 민족주의의 원인에만 관심이 있고 민족주의의 영향, 특히 국제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음을 비판했음.¹⁾
 - Joseph Rothschild는 정치화된 민족성은 계급과 사상의 투쟁을 대체하고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을 판단할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국가 내부 그리고 국가 간의 충돌의 경계임을 주장함.²⁾
 - James Mayall은 그의 저서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1990)을 통해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토만 제국들의 해체를 유도했으며,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를 그리고 영국에서 아일랜드를 분리시켰으며, 이탈리아

1) Evera, Stephen Van. "Hypotheses on Nationalism an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4 (Spring 1994), p. 5.

2) Rothschild, Joseph. *Ethnopolitics: A Conceptual Framework*.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 31.

아와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 했으며, 특히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 대전 발발과 1945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의 핵심 요인이 되었음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그는 민족주의와 국제체계의 성립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주장하였음.

-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며 국제사회에서는 Globalism의 확장과 더불어 아이러니하게 민족주의의 부상이 나타나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의 움직임(독일 통일)을 일부지역에서는 분열(유고 사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동티모르 독립, 체첸 사태 등)의 원인이 되는 등 냉전 후의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린 후 James G. Kellas (1991), Richard Bernstein과 Ross H. Munro (1997)등을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이 민족주의로 인한 국제사회의 분쟁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며, Allen Whiting (1995), Quansheng Zhao (2002), Suisheng Zhao (2004) 등은 냉전 후 중국의 외교정책과정의 연구에서 민족주의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결정요인으로 간주하였음.
 - 실제로 중국 중화 민족주의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만을 미사일로 위협하며 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치달았었음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95-96).
 -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는 일본 역사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슈를 일으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냉각시켜왔음.
 - 한국의 민족주의는 2002년 전국적인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되며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며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음.
 - 필리핀의 민족주의는 반미감정으로 이어지며 냉전 후 수빅 (Subic)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폐쇄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IV. 민족주의 갈등의 원인들

A. 국제체제의 변화: 냉전의 종식과 Globalism

- 냉전 후의 세계에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화가 진행되며 국가 간의 벽이 허물어지거나 낮아지는 통합의 분위기가 나타나며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공존

되는 현상과 향후 글로벌 시대 하에서의 민족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깊은 논쟁이 벌어졌었음.

○ 특히 민족주의 이론의 연구가들은 글로벌 시대의 민족주의의 운명과 역할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시각들로 서로 논쟁을 벌였음.

- 첫 번째로 다수의 근대주의자들은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근대화 과정의 생산물이었으므로 근대화 과정이 끝난 현재는 민족주의의 역할은 끝이 났다고 보았음. 특히 에릭 홉스봄은 민족주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사라질 운명이라고 주장하였음.³⁾
- 두 번째로 일부 근대주의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근대화는 산업 자본주의, 관료국가, 발달된 통신과 교통수단을 소유한 대중 집단사회, 가족의 가치 변화와 성의 혁명(sexual revolution) 등을 불러왔으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과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아직 진행되는 전 세계적 근대화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대규모 공동체의 유지, 사회적 결집과 현재의 민족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매우 드문 수단이므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와 더불어 아직 사라질 시기가 아니라 예상함.⁴⁾
- 세 번째로 원생주의자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이들은 민족주의는 근대화의 산물이나 정치가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도구가 아니며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역사, 종교, 언어, 문화의 나눔으로 서서히 형성되어져 왔으므로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리라고 봄.
- 끝으로 永恒주의(Perennialism) 그룹은 원생주의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는 근대화 이전 시기에도 존재하였으며 이는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하지만 원생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민족주의는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 따라 사라지기도 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는 시대적 역할에 따라 존재할 수도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라지더라도 민족주의는 다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라 주장함.⁵⁾

3)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75-176.

4)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1). Anthony D. Smith,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Cambridge, UK and Malden, MA, USA: Polity Press, 1995), p. 4.

5) Walker Connor,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이러한 다양한 시각 중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나 냉전 후의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였으며 국제체제에 영향을 끼쳐왔음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음.
- 냉전 후의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민족주의 부상이라는 두 모순된 현상의 공존은 강대국들의 이익과 서구사상의 가치관과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중간 그룹과 약소국가들 그리고 非서구국가들의 반발과 자구적인 반응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냉전 기간 중 각 국의 안보와 양극화된 사상의 경쟁 속에서 가라앉아 있던 민족주의가 냉전 후 공산주의 블록으로부터의 위협 소멸과 사상 경쟁이 끝나며 일부 민족 독립/분리주의 운동 또는 일부 공산주의 국가의 사상 공백 현상과 더불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됨.

B. 국내 정치 이익의 요인

- 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과 이에 따른 국가 간 갈등의 심화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함. 여기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예를 분석하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용했으며, 또 어떻게 국가 간의 갈등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겠음.

1. 중국

- 냉전이 끝나가는 시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내·외부적으로 곤란에 처해있었음. 외부적으로 1970년대 초 미국과의 데탕트를 이끌어 내며, 한편으로는 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었음. 하지만 구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부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내부적으로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며 인민들의 민주화의 요구와 이에 따른 공산당 리더십의 권위가 흔들렸었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강대국들은 곧바로 중국정부의 천안문 시위자들에 대한 유혈과잉진압을 비난하며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였고, 사상의 경쟁 시기였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공산주의 사상의 중국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의 정통성이 시험에 오름.

- 중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력 약화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였음. 첫 번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1949년 이래 유지되어온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둘째로 그간 공산주의 국제주의에 둘러져 왔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부상의 문제였음.
 - 특히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근대시기에 접어들며 손문(Sun Yat-sen)을 중심으로 공화국 건립과 민족의 개념 정리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까지도 티베트와 위구르 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의 통일 문제와 연결되며 공산당 지도부의 심각한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음.
 - 당시 손문은 공화국 건립을 준비하며 중국민족을 크게 국족(国族)이라 부르며, 국족은 한족(汉族)과 소수민족인 만(满), 몽(蒙), 회(回), 장(藏), 조선(朝鮮)족 등을 포함한 족군(族群)으로 구성되었다고 정의하였음.
 - 현재 중국정부 중화민족주의를 제창하며 중화민족(中华民族)을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함께하는 대가정(大家庭)으로 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다민족 통일국가로 정의하고 있음.
-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국내정치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애국주의적 민족주의를 사용하며 개혁 개방 정책의 효과로 인한 눈부신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공산주의 사상의 정치적 영향력의 공백을 민족주의로 대체하며 국내의 민주화 요구와 소수민족 문제를 억제하고 공산당 일당 통치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국 내에서의 애국적인 민족주의 제고를 위해 중국정부는 특히 일본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 문제와 남경대학살 문제를 사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냉전 시기와 냉전 후의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졌었는데 유연하게 처리하거나 일정부분의 한도를 넘지 않는 대응을 해오던 중국정부가 냉전 후 점진적으로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하며 중국의 반일감정과 애국주의를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강화와 공산당 중심의 단결로 이어 가려 노력하였음.
- 중국정부는 또한 중화 민족주의를 외교와 경제 정책에 실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중화민족의 범위를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이외에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그룹을 포함하는 광의적 해석으로 대만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북미, 유럽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화교 그룹들과 중화민족주의를 매개체로 대중화경제권 (the greater Chinese economy)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하지만 중화민족주의는 현재 양날의 검이 되어 중국 지도부에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음.
 - 개혁개방 정책 이후 이룩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냉전 후 중화민족주의의 강조로 인한 중국인들의 강한 자긍심과 높은 자존심, 그리고 19세기 중반 시작된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약 1세기에 걸쳐 서구 강대국들과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를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 등이 어우러져 외부의 압력이나 분쟁에 대해 강한 중국의 모습을 요구하는 국내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보여 주었던 강경한 외교정책의 모습들은 이러한 국내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중국인들의 요구를 일부 해소해 보려는 중국 지도부의 계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중화민족주의의 기본 개념인 “다민족 통일 국가론”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강화를 위해 시작된 중국 변방지역 연구의 하나인 동북공정(東北工程, 원래 명칭은 東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은 2004년 한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으며 이때 이후 떨어진 한국인의 對중국 호감도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2. 일본

-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의 부상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행해졌던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적 유산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역사 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하여 자국의 우익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우익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있음.
 -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는 후지오카 노부카츠, 하야시 마리코, 타카하시 시로 등이 이끄는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自由主義史觀研究会)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모임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등이 일본 우익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일본 우익 교과서의 출판과 채택의 확장을 꾀하고 있음.
 - 야스쿠니 시사참배 문제는 일본 유족회(日本遺族会), 군인 은급 연맹(軍人恩給連

盟), 신사 본청 (神社本庁) 등의 압력 단체가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일본 유족회는 한때 일본 자민당 내에서 상당한 투표 세력을 형성하였었음.

- 반면 냉전 후 일본 정치계에서 주변국과의 역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일본 사회당을 필두로 한 좌파세력의 몰락으로 현재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는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으며, 현 우익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에 마땅한 대항마 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일본의 우익 민주주의는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 선유도 분쟁,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이슈화하며 자국 내에서의 우익 세력 결집과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진행하고 있음.

3. 한국

- 한국은 그간 민족주의 이슈가 걸린 외교적 사안들에 대해 조용하면서도 실용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주로 보여 왔으며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며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임.
- 과거 한국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거나 대중의 지지도를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거나 민족주의 이슈가 걸린 정책을 실행하였던 예가 종종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경우 과잉 대응 또는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린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의 실행으로 앞서 구축하였던 대외 협력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음.
- 물론 중국과의 2004년의 동북공정문제, 올해 초의 탈북자 문제, 이어도 분쟁 등은 한국정부로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한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점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의 향후 정권과 한국 사회는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권의 전반적인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히 강조 되어야함.
 - 예를 들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주권 의지를 보이는데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임. 실제로 다음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6%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도는 6월 31.4%, 7월 28.2%로 떨어지다가 8월 16일 31.5%로 약

간 회복했다. 하지만 58%이상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⁶⁾

V. 결론

- 현재의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이론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근대주의론 (Modernism)과 原生주의론 (Primordialism)의 대표적 예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특성은 그 생성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국가 내부의 정책 결정과정과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
- 특히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근대주의와 원생주의의 충돌 (중국의 중화 민족주의와 소수 민족 정체성문제)과 bottom-up (한국의 문화민족주의) 과 top-down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의 민족주의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국가들 간의 민족주의 요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마찰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는 데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그동안의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심화와 이로 인한 갈등의 증가는 냉전 이후의 국제체제 변화, 신자유주의적 Globalism의 확산,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 지역 경제의 발전,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되리라 예상됨.
- 이러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상황 하에서 각국의 민족주의 심화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내 국가 간의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관계 수준 (international level)과 국가내부 수준(state-level)의 구별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국제관계 수준에서는 기존의 역내에 형성된 다자 기구들을 (APT, EAS 등) 통해 역내의 universal한 제도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참여 국가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는 각국의 민족주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기준의 수용, 다 지역에서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계속되어야함.

6)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 주간 조사 결과 요약” (6월-8월 조사 결과들). Online available (http://www.asaninst.org/03_publications/report_list.php?type=research_report)

- 국가내부 수준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 이슈를 정권의 정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제고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의 긴장 또는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을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 부분에서 특히 향후 NGO의 역할이 중요해 지리라 예상됨.
- 비록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주변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상조이나, 각 국 정부가 국가 간 분쟁의 이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과 민족주의적 이슈들을 정권의 정통성이나 지지율 제고에 사용하는 것을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도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P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한중일 삼국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세계경제위기

II. 중국의 부상

III. 동아시아의 영토·자원분쟁

IV. 미국의 아시아 회귀 외교

V. 일본의 보통국가화

VI. 한반도 정세

VII. 한중일 관계의 갈등과 협력

I. 세계경제위기

2012년은 한국을 비롯하여 마중알러 주변4강의 리더십이 변화하는 변환의 해이다. 2012년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복합성을 더하는 요인은 안보위기와 함께 경제위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는 1929-1934년의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연상케 한다. 경제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경제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경제시스템을 유지할 패권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취해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면서 경제공황과 파시즘의 대두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미국의 정치·경제패권이 약화되면서, 자유무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자원·에너지 등을 위한 경쟁·갈등이 고조되고, 동아시아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자원분쟁에서 소규모 갈등·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2012-13년에 다가올 위험요소에는 세계경제위기가 존재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경제의 충격이 큰 상태에서, 유럽의 그리스와 이태리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재정악화가 유로존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2012-13년에는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에 의해 관리되었던 세계경제시스템이 미국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함께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G20정상회담과 같이 선진국G7에 신흥경제국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다자주의적 시스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 G20성명과 같이 다자주의적 국제기구가 형성되어 운용될 때 각국의 행동이 타국이나 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하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세계경제시스템을 원만하게 재편하고 유자·발전시키면서, 국가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를 관리·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원할히 수행해야 한다.

II. 중국의 부상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회복이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고민하고 있고,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2012-13년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중국의 경제는 많은 위험성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 증강이 두드러지면서, 명실상부한 G2로서 중국의 부상이 인정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주도의 신질서가 형성되리라는 전망이 다양하게 대두된다. 21세

기에 들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편,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위협론이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미국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단순히 경제성장률로 보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지적된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이 현재 속도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으로,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률이 저하되는 점과, 인구학적으로 볼 때 중국의 소자화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마중간 권력이동(세력전이)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력 이외에 군사력을 보면,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하게 달성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이 접근차단(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전략의 강화로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축적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전략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 전개를 방해·저지· 지연시키면서 중국의 군사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한국·일본·호주·인도·베트남·필리핀 등과 경제적 및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마일 동맹이 강화되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및 안보측면에서의 상호협력이 진척되고, 미국에게 긴요한 오키나와 등의 주일 미군기지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패권주의적 외교안보전략에 대응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협력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형세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현실성은 매우 낮다. 정경분리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마중일간에 경제와 안보의 복합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위상 약화를 고려하면 마중간의 전략대화와 정상회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력전이에 의한 마중간의 패권 전쟁 가능성에 관하여, 패권국 미국의 유연성과 도전국 중국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에 의거해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마중간 전쟁의 위험은 그다지 높지 않고,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중국과 국제사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우월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와 패권국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직적 대응의 우려가 제어된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21세기 권력이동(세력전이)은 패권전쟁 없이 실행될 수도 있다.

III. 동아시아의 영토 · 자원분쟁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동북아에서 영토분쟁의 심각성에 대한 재고의 분위기가 일었다. 동북아에 모여 있는 강대국인 일본·중국·러시아 및 한국은 실질적인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상태에 있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두고,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 일본은 독도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1905년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센카쿠열도는 청일전쟁 끝나갈 때 1895년 오키나와현에 편입했고, 남쿠릴열도는 태평양전쟁에 패하고 1945년 소련에게 점령당했다. 그야말로 동북아의 영토분쟁은 일본제국이 19세기말 성장했다가 20세기 중반 패망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상황으로 전쟁의 결과로 규정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이 동북아에서 21세기에다 재발할 수 있게 되는 원인에는 두 가지 분석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태평양전쟁 이후 전후 처리가 미완결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19세기 말-20세기 중반과 유사한 국제적 상황이 21세기에다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이다. 우선 첫째 요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태평양전쟁이후 1945-52년까지 미군정이 일본을 지배하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면서 동북아의 영토문제가 규정지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그 강화조약 내용은 동북아의 역사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작용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중일간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살펴보면, 19세기 말까지 중국이 관할했었고(중국의 입장), 1895년 일본이 대만과 부속도서를 할양하면서 오키나와에 편입시켰고, 1945년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에 이양되었고,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으로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에 대한 판단을 자의로 내리지 않고 기존 체제를 그대로 인정했거나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수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로서 미국의 관할 상태에 있었다.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는 현재 일본과 중국, 대만의 영토로 등록되어 있고, 영유권을 두고 수차례에 걸친 충돌이 있었다. 1978년 당시 덩샤오핑 중국 부수상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단 보류되더라도 다음 세대에 해결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한 발언이 현재까지 중국의 외교적 입장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표 1〉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중일의 입장

시기	관할국	주요 입장	
		중국	일본
19C말	중국	중국 고유영토, 1534년 처음 발견	무주지, 강제할양과 무관
청일전쟁후	일본	1895.4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대만 및 부속도서 강제할양	무인도 선점, 1895.1.14 오키나와에 편입
2차대전후	미국	중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이 미국에 불법이양	미·일 강화조약에 의해 적법이양
오키나와반환	일본	중국영토의 미·일간 거래	미국관할에서 일본으로 복귀

동북아에서 21세기에도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둘째 요인은 19세기 말-20세기 중반과 유사한 국제 상황이 21세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870년대 메이지유신을 거쳐 일본의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로 제국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1930년대 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겪고 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러한 세계대전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커다란 작용을 했고 이는 영토 분쟁 및 자원 쟁탈전과 연계되어 있었다.

중국이 최근 다오위다오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명실상부한 G2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화평굴기와 도광양희의 소극적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국익 위주의 외교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최근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가 천안함 사태 전후에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듯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멀어지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895년과 1930년대 중국과 일본간 전쟁의 과거사가 되새겨지면서 양국의 민족주의가 재확인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사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자원에너지에 대한 영토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은 장기적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중일간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경제안보를 분리해서 대처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10년은 일본에게는 과거 제국의 확대와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해나간 1905년과 1910년의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새롭게 일본의 재건을 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자민당의 고이즈미 정부가 역사교과서와 영토분쟁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우선하는 강력한 아시아 정책

을 전개해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반일운동이 심하게 발생했다. 2009년 9월에 취임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부는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시키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추구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반신반의의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영토·자원 문제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베트남, 필리핀 등)의 긴장 고조 상황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행사에 대응해 7월 일본·호주와 3국 공동 군사훈련 및 베트남·필리핀과도 2국 공동 군사훈련을 실행했고, 2012년 4월에도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도 2012년 4월 한반도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관련해서 중일간 영토분쟁이 격화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서 한일간 영토분쟁도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영토·자원분쟁이 무력충돌의 상태로 나아가면 동아시아의 커다란 비극이 되고, 미국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영토·자원분쟁이 심화되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생기고 반중국 안보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 및 항행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 영토·자원 분쟁과 군비 경쟁은 국가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악화시키고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

IV. 미국의 아시아 회귀 외교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개입 정책 (Asia-Pacific Re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 호주·필리핀과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차원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미국은 국방 예산을 10년간 최대 1조 달러 삭감할 예정이지만, 아태지역의 핵심 전력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일본과 ASEAN이 포함된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EAFTA)을 체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TPP구상은 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을 띤다.

매년 1조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항행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호주 다윈에 2500명의 미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는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 미국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베트남·미얀마와도 화해와 관계 강화를 추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가했다. EAS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에 인도·호주·뉴질랜드 3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 참가하기로 했다. EAS가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는데,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해양에 관한 국제법이 지역의 평화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 규범을 담고 있다는 인식 등을 담은 선언이 채택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외교의 주요인은 미국 경제의 회복이 아시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여력이 크고 역동적인 아시아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대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EAS에 참가했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외교 전략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1월 호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 최우선’을 선언하고,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래 구축을 위하여 보다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보 차원에서 국제법이나 관습이 준수되고, 통상과 항행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는, 신흥국이 지역의 안전에 공헌하고, 의견 대립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국제 질서를 지지해 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희생하면서 실행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군의 배치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일본과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동남아에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전보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태국과는 합동으로 재해구조를 하고, 필리핀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미국의 관여에 흔들림이 없다. 미국은 핵확산에 관한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관련 물질을 다른 나라나 국가 이외의 조직에 이전할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다. 인도가 아시아 국가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 공약에는 국제 협력 중시와 함께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유지·강화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대선 공약에는 부시 대통령 때와 유사한 ‘강한 미국, 힘의 외교’ 선언이 제창되었다.

V. 일본의 보통국가화

복합적인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보수화 및 보통국가화·군사대국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2012년 6월 일본 정부가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삽입한 것에 대해,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 고누마 미치지(小沼通二)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에 위배되는 원자력 관련법 개정을 은밀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세계평화호소7인위원회는 이 규정이 원자력의 실질적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 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다(프랑스·영국 등 해외에서도 플루토늄을 입수했다). 일본은 핵무기 제조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일본 총리 및 방위성 간부가 수시로 수개월이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일본정부는 2011년 말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해서 무기의 공동 개발 및 수출을 완화했다. 따라서 미국과의 차세대 전투기개발 등 군수 물자의 공동 생산과 수출 판매가 용이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우주 관련법 개정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군사 목적의 우주 개발을 허용해서, 위성을 이용한 미사일방어(MD)시스템구축 등 우주 무기의 연구 개발 및 수출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췄다. 일본은 소행성탐사를 성공시킨 우주 기술 강국이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증강 및 그에 따른 영토·자원분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후 평화 헌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우선·안보 자제의 원칙과 정책이 변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관련한 군수산업, 우주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 등의 제한을 없애고 연구 개발·수출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 속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1년 동 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당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 안보 관련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정찰위성·조기경계위성·요격미사일·레이더무기·원자력무기·원자력잠수함·차세대전투기 등 일본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수 존재한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평화헌법9조의 군대 보유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전력의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군과 공군은 한국군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한국의 두 배 수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헌법9조의 교전권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다 총리의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평화프런티어소위원회’의 보고서(2012.7)에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고서 관련자는 북한 체제의 붕괴나 센카쿠열도에서의 중일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세력 전이의 과정에서 주요국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하면, 헌법9조가 인정하는 자위권 발동은 일본이 무력 공격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나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가 긴급 사태에는 선제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전권과 함께 전수방위의 원칙(일본은 먼저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왔다. 비핵3원칙(핵생산·보유·반입금지)도 안보관련 원자력 이용과 함께 무너질 수 있고, 핵반입 금지 원칙은 주일 미군의 핵반입 밀약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는 논의도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기위해 자위대법과 평화유지활동(PKO)법을 개정해왔다.

결국 평화헌법9조는 형해화되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후 미국주도에 의해 성립된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보통국가론에 의하면, 일본이 정상적인 보통 국가로서 정상적인 안보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이후 1차 헌법(1889)을 성립했고, 태평양전쟁이후 2차 헌법(1946)을 형성했는데, 이제 3차 헌법을 성립할 제3의 개국시기가 도래했다고 한다.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동일본대지진의 재난을 맞아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는 일본의 산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단합해서 추진해 나갈 유신과 같은 새로운 국가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 개정과도 연계되어 있다. 부국강병을 위해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헌법을 성립할 수 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는 일본천왕을 국가 원수로 격상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정치의 총보수화 현상이 있어서 자민당·민주당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이 다수 존재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은 한국 전쟁과 냉전 시기에 소련·중국·북한의 공산권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 권유했다는 논의가 있고, 일본이 경제우선·전쟁반대를 위해 평화헌법의 유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일본에는 반핵·반전의 국민정서와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한편 마일 동맹의 향방과 관련해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해방·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하라 신타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일 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이 마중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테라시마 지츠로), 주일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오자와 이치로), 일본 여론이 싫다고 하면 주일 미군이 떠나야 한다는 주장(다수의 전문가), 마일 동맹을 계속 유지·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다수의 전문가) 등 다양한 논의가 등장했다. 마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과 함께,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이 독자적인 안보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복합적 의도가 공존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국가 긴급 사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본의 지도층이 안보 외교 정책과 군사력 증강 등과 관련해 강력한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6월에는 일본자위대가 42년 만에 도쿄 시내에서 행군을 실시했고, 7월에는 도쿄 등지에서 통합막로장(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진 대비 종합방재훈련이 실시되었다.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의원그룹 49명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했고, 야당인 자민당은 내각 불신임을 통해 연말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진력한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의 국가 개혁과 보통국가화·군사대국가화가 진전되고, 중일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VI. 한반도 정세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었고,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에 대한 비난과 압력이 강해졌다. 한국·미국·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안보적 요인과 중국과 경제 협력을 유지하려는 대중국 유화 정책의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적 외교가 동북아에서 가져올 반발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복합적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2011년 5월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안전과 방재 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명기한 정상 선언을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됨으로써 한·중·일 협력이 제도화되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로서 핵테러 방지와 ‘방사능 안보’로서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연계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였고 구조적으로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 형태를 띠고 있다.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의 변수와 함께,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 등의 복합적인 목표를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전략에 따라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영토자원 분쟁·군비경쟁·핵무장 등 동아시아의 복합적 안보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응하여 일본 및 한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안보억지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고, 핵무장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주변국에게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한국정부가 유사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를 용인한 것은, 중국이 내해처럼 여기는 서해의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이익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한반도 급변사태 때 중국의 서해 통제시도를 차단하고 한·미군함의 서해 활동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한다. 최근 서해에서 중국·러시아·미국·일본·북한·한국의 군함들이 합동훈련 등을 실행하는 도중에 사소한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한반도주변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청일전쟁·러일전쟁·중일전쟁·한국전쟁 등에서 보듯이, 일·중·러·미를 포함한 동아시아강대국의 패권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전략적 평가에 대해 한·일·미 3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협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파악하는데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중·일·러·북한의 국가 이익과 외교 전략을 보다 냉철히 분석하고, 이에 현실적·실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세력 불균형에 대응해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초한 한중일+미국의 세력균형 구조 즉 동아시아 균형 네트워크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일의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데 세력 균형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동북아의 다자 안보체제와 다자 협력체제의 형성과 기능이 중요하다.

Ⅶ. 한중일 관계의 갈등과 협력

한중일 관계의 협력 전망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요인이 작용하여 순조롭게 진전되기가 쉽지는 않다. 다양한 갈등과 경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중일 협력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한편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의 무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동량 및 인적교류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의 교류 협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에서의 높은 교육열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경제 성장

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 역내 무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역내 협력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중일 정상 회담과 협력 사무국이 설립된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중일 협력체를 결성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요소가 만만치 않다. 지역 내 군사 안보적인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경쟁 관계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 부문에서는 역사 및 문화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 외교적 차원에서는, 새롭게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 외교 및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면서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세가 나타나고, 최근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은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일 및 한일간의 영토 분쟁 심화는 결정적인 안보적 불안 요소로 상존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 3국간의 수평적 경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과거 불행한 역사의 기억으로 인하여 한중일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한중일간 문화 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문화 교류의 확산이 한류·반한류 등과 같이 문화적 경합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중일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유지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중일 협력이 논의되고 강화되었다. 금융위기 시 통화금융 협력과 대지진시 방재 협력 및 무역 투자 교류의 경제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필요에 따라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안보 협력도 지속되었다. 나아가 한중일의 공동 비전과 네트워크 형성, 상호 문화의 이해, 자원의 공동 개발, 영토 문제의 장기적 평화적 해결 방안, 다자 협력 체제의 형성,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 다자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형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의 구상과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5차 전문가포럼 |

동아시아시대를 대비한 역내국가 간 갈등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가

NOTES



137-878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3-2 우일빌딩 5층
5F, Wool Building, 1623-2, Seocho-1dong,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137-878
Tel +82-2-581-0581 Fax +82-2- 581-4077
www.peacefoundation.or.kr staff@peacefoundation.or.kr